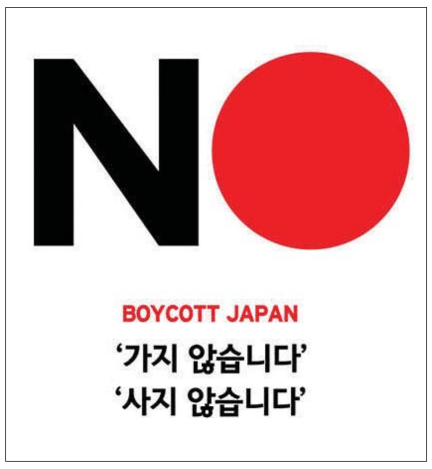
소니·JTI 등 韓 진출 日 B2C기업 제품출시 잇단 연기

〈기업대 개인〉

JTI코리아 신제품 공개행사 취소
카메라업계 판매량⬇… 대책마련 중
기업 상대 'B2B업계' 악영향 없어



한일 관계 악화속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기업은 예정되어 있던 신제품 출시를 돌연 취소하고 사태를 주시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면 기업을 상대하는 B2B(기업 간 거래)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등 명암이 갈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니코리아와 JTI 코리아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신제품 공개 행사를 취소했다. 소니와 JTI는 각각 무선이어폰과 담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소니는 지난 8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 되었다'는 내용을 메일로 알렸다. 소니 관계자는 "내부 사정이라 자세한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며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행사는 취소됐지만 제품은 예정대로 출시된다. JTI는 '날씨'를 취소 사유로 밝혔다. 실외 행사로 계획했는데 행사 당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취소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국내 소비자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여는 것은 일본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 시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 확산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지난주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일본 수입 맥주 모습. /연합뉴스

대표적 B2C 기업인 카메라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논, 소니, 니콘, 파나소닉, 올림푸스, 후지필름 등 카메라 회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카메라 제품의 경우 니콘과 캐논, 소니 등 일본산 제품의 비중이 70%를 넘고 대체할 상품이 없는 만큼 카메라 회사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7~8월이 카메라 성수기인데도 판매량이 줄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회사가 파악하기론 7월이 6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하는 전통적인 판매 비수기에 속한다"며 "판매량 감소가 계절의 영향인지 불매운동의 여파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는 분주한 모습이다. 그는 "회사는 현재 상황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일본 본사에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문제인 만큼 회사 자체의 대응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본계 기업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 업체 중 기업을 상대하는 B2B 기업은 B2C 기업과 달리 일단은 안정적인 모습이다. B2C 기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B2B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B2B 사업 비중이 높은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소비재 판매보다는 기업고객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던가 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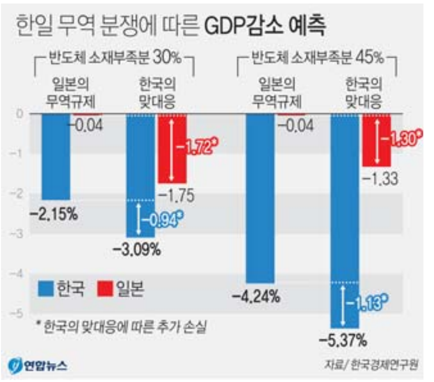
경제보복 맞대응땐 韓 GDP 3.1%, 日 1.8% ⬇

한경연, 긴급세미나 개최
한일분쟁 최대 수혜국은 '중국'
GDP 0.5%~0.7% 증가 효과

일본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 GDP 손실이 2%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관세 전쟁으로 0.15~0.22% 가량 GDP 손실을 예상했다. 만약 한국이 대일보복에 나서고, 반도체와 반도체부품을 선택한다면 GDP 감소가 2.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은 0.04% 피해만이 예상된다며, 수출규제로 대응한다고 해도 한국은 3.1%, 일본은 1.8% GDP 손실을 본다고 발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며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라고 예상했다. GDP가 0.5~0.7%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한국이 0.6%, 일본이 15.5% 생산 감소를 겪는 동안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도 빼앗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90일 후 일본이 수출 승인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산업 특성상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은 일본에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에 특히 이슈가 있어 국산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근본적 원인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상정책 대응은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 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강대 허윤 교수도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

논산파랑새합창단과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동양육시설 초중생으로 구성된 논산파랑새합창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금감원, CPA시험 문제유출 의혹 부인

출제·제출·채점과정 등 조사키로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제2차 시험의 문제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의혹을 부인했다. 기출문제나 관련 교재들에서도 다루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시험 채점과정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특정대학에서 실시한 특강내용이 출제문제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이 된 PPT자료는 최근 변경된 제도나 감사기준 위주로 단순히 제목만 나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특강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출제위원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4월 19일에 특정대학 고시반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CPA 2차시험 답안지 작성 특강'으로 대부분이 답안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관련 내용은 '2019년 중점정리 사항'으로 한 페이지다.

금감원은 또 "특정대학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문제 역시 실제 문제는 형식상 유사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인데다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출문제 및 관련 교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고 질문과 표현방식 등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문제유출 의혹은 부인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험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2개)의 경우 해당 출제위원이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시험 채점과정에서 동 문제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시험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취업자 수 1년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6월 2700만명… 전년比 28만명 ⬆
30·40대 줄고 20·50·60대 늘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33만4000명)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취업자는 1월 1만9000명 증가한 후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증가하고 4월과 5월 각각 17만1000명, 25만9000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교육서비스업(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6만6000명)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7만5000명), 제조업(-6만6000명), 금융·보험업(-5만1000명)에서 감소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시중은행의 점포 및 임직원 축소 계획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8만5000명 감소한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38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3만2000명, 18만2000명 줄었고 20·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석대성 기자 bigstar@